

중국의 회색지대(Gray Zone) 전략과 우리 군의 대응 방안

- 해상에서의 비대칭 접근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최정준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중국이 최근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해군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비대칭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색지대 전략’에 대하여 살펴본 이후 우리 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으나 양국 간에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서해 경계선 획정, 대륙붕 개발, 해양과학조사 활동, 해양환경 보전 문제 등은 여전히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해군력을 증강하고 해양경찰(CCG), 해상민병대(PAFMM) 등을 활용한 해상에서 회색지대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회색지대는 전쟁과 평화 사이에 있으며, 특정 지역에 속하지 않는 불분명한 중간 지대를 의미한다. 중국은 이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상 영토분쟁국 및 해상 경계선 미확정 국가에 해상 회색지대 작전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비군사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상황이 무력 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수적인 우세와 점진성, 그리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기정사실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이 회색지대 전략의 주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해양경찰과 해상민병대는 사실상 중국의 제2해군력으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을 대신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미확정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이어도 해양 관할권 문제 등으로 중국과 해양에서 갈등 요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 회색 지대전략을 추구함으로써 향후 한중 간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해양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의 비대칭 전략 일환인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첫째, 중국과의 해상분쟁 발생 시 가용자산을 통합 운용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한·중 간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서해상 해군 전진기지를 건설하여

* 논문을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E-mail: choijj4801@hanmail.net)

중국의 동진을 억제해야 한다. 넷째, 동맹국과 연합하여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회색지대 전략 대응을 위한 군의 대응 교리 및 전술을 개발해야 한다.

*주제어: 비대칭전, 회색지대 전략, 중국 인민해방군, 해상민병대, 기정사실화

I. 서론

1991년 소련의 붕괴로 국제질서는 미국 유일의 단극체제를 유지하다가 근래에는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연합하여 다양한 대중국 봉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이 패권국가로서 형성해 놓은 질서에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허를 찌르고 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심화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른바 냉전 시기 북방삼각관계(북·중·러)와 남방삼각관계(한·미·일) 간의 대립 구도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미국의 목표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을 유지하는 것에 있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분쟁을 피하는 비군사적 개입을 수행할 수 있었다. 중국의 전략은 사다리의 최상단계를 추가하는 대신 비군사적 부대를 무력적 요소로 활용함으로써 사다리의 최하단 아래에 단계를 추가하는 것이었다. 이 전략은 다음의 두 가지 비대칭성을 이용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중국의 준 해군 활동에 대항할 만한 회색지대가 부족하고 주변국은 중국의 준 해군력에 비해 열세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다. 둘째, 중국의 성공은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위기와 충돌을 막기 위해 작전 확대를 조심스럽게 피하는 것을 포함하는 자제력을 기반으로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력과 군사력의 사용을 자제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앤드류 에릭슨·라이언 마틴슨 2022, 4).

미·중 패권 경쟁은 한국에게 기회이자 도전의 요소이다. 한국이 다자주의를 통해 미·중 양국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양 강대국의 틈새를 활용하여 우리의 국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양국 중 한 국가를 선택하여 갈등 관계에 연루될 때 우리의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30년 이상 되었으나 여전히 양국 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서해를 사이에 두고 양국은 해양 경계선 확정, 대륙붕 개발, 해양과학조사 활동, 해양환경 보전 문제 등은 여전히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언제든지 수면 위로 부상하여 양국 간에 첨예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는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취임 시부터 해양에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해군력을 증가하고 해양경찰 그리고 해상민병대 등 다양한 해상세력을 강화해왔다. 특히, 해상민병대를 활용한 ‘회색지대 전략’은 전통적인 군사 위주의 대응을 무력화시키는 비대칭적인 것으로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중국이 서해상이나 이어도 인근 해역에서 회색지대 전략을 활용하여 우리의 영해와 국익을 침해할 경우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관련하여 선행 연구로는 첫째, 동아시아 해양 분쟁에서 중국이 어떻게 회색지대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고충석 외 2020; 김예슬 2020; 김진호 2020, 81-100; 이상현 2020, 91-122), 둘째, 한반도 주변의 회색지대 위협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국방대학교 2022; 김창곤 2020, 92-130; 반길주 2020, 35-69; 양욱 2020, 249-280)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비대칭전 관련한 연구의 대부분은 북한의 위협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제시하고 있다(노훈 2013, 84-112; 안덕신·길병옥 2020, 249-277; 황진환 2002, 275-299).

기존 연구들은 회색지대 개념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과 국가 차원의 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연구가 표면적인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만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활용하고 있는 회색지대 전략의 본질은 비대칭전의 한 수단이다. 패권국 미국에 대응하기에는 아직 해군력이 열세에 있으므로 중국은 민간어선(해상민병대)-해경과 필요시 해군을 주수단으로 활용하여 비대칭전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의 비대칭전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해상에서 우리의 권익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군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해 그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전략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국

이 동·남중국해에서 주변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색지대 전략을 전형적인 비대칭 전략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고 중국이 우리 영해에서 유사한 전략을 추구할 시 우리 군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관련 국내외 연구자료를 활용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 글의 구성은 제2장에서 새로운 도전 요소로서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분석의 틀을 제시한 후에 제3장에서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수단과 적용사례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한·중 간 해양 갈등 요소와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를 도출하였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대비태세 수립이 필요하며,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전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I.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1. 비대칭 전략

비대칭전(Asymmetric Warfare)은 전쟁에서 강대국에 대한 약소국의 승리 요인을 함축적으로 설명할 때 사용한다. 즉 상대적으로 전력이 차이가 나는 상대방에게 승리하기 위해 정공법이 아닌 기공법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이 가진 우위를 상쇄시키는 전략이다. 이러한 비대칭 전략은 인류가 전쟁을 수행하면서부터 활용되었던 전략이었다. 그러나 비대칭 전략이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냉전 이후 새로운 안보 환경이 조성되면서 국력 차가 현격하게 나는 강대국에 대항하는 비국가단체인 테러집단, 정규전 이후 안정화작전 시행과정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비대칭적 접근이 부각되면서 그 중요성과 유용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비대칭 전략은 손자병법 허실편에서 말하는 적의 강한 곳을 피하고, 적의 허점을 쳐서 승리하는 전법이다(노병천 1999, 156). 이러한 비대칭 전략의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적이 우리 측과 상당히 다른 작전방식을 사용하여 우리의 취약점을 이용하고 강점을 약화시킨다. 우리의 강점을 회피함으로써 적은 우리의 주도권, 행동의 자유 및 의지에 충격 또는 혼돈과 같은 심리적 영향을 준다. 둘째, 적이 우리 측의 취약점을 면밀히 평가하

고, 전통적인 전술, 기술 등을 혁신적으로 배합하여 사용한다. 셋째, 모든 전쟁 수준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모든 유형의 군사작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노훈 2013, 86-87).

이렇듯 비대칭 전략은 상대방의 강점에 대한 회피와 취약점을 활용하고, 나의 행동을 적이 예상하지 못하게 하여 대응과 예측을 곤란하게 하며, 작전방식의 차별화를 통해 상대를 심리적·물리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2. 회색지대 전략

1) 회색지대 개념

회색지대는 2009년 3월 남중국해 해남도 인근 해역에서 일어난 중국 민간 선단에 의해 미국 해군 과학조사선 Impeccable 호 항로 방해 사건 직후 발간된 미 국방부의 2010년 판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에서 새로운 안보 도전 발생 영역 또는 분야로서 ‘회색지대’(gray zone 또는 gray area)를 언급한 바 있다. 미 국방부는 이 용어를 냉전 종식 이후 ‘완전한 전쟁도, 완전한 평화도 아닌 애매모호한 영역과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도전이 제기되는 현상을 지적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 개념을 사용하였다(앤드류 에릭슨·라이언 마틴슨 2020, 31-32).

회색지대는 특정 지역에 속하지 않는 불분명한 중간지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회색지대는 상대방에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다양한 수단이 활용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방법을 적기에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 회색지대(gray zone)에 대한 대표적인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릭슨과 마틴슨(Andrew S. Erickson & Ryan D. Martinson)은 회색지대(Gray Zone)를 “전쟁과 평화라는 전통적인 이중성 사이에 있는 경쟁적 상호작용”으로 정의하며, 회색지대 활동은 의도적으로 0~1단계로 유지되며 군사행동이 단계로 확대되는 것을 피한다. 대조적으로, 하이브리드 전쟁은 군사력을 힘의 한 가지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전쟁 스펙트럼의 2~4단계에 속한다(앤드류 에릭슨·라이언 마틴슨 2020, 3).

둘째, 회색지대는 전쟁과 평화 사이의 상태로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들은 군사 수단이나 활동을 사용하지 않고 적을 축출하고자 한다. 회색지대 분쟁의 목적은 적을 패배시키거나 영토를 점령하고자 하는 데 있지 않고, 적을 회색시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 있다(Goldenberg et al. 2020, 1-25).

이상의 정의로 볼 때 회색지대 전략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군사력(무력) 또는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보다 비교 우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수단을 사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키우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즉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무력 사용 없이 안보 이익을 성취하는 전략이다(고충석 외 2020, 35).

2) 회색지대 전략의 특성

회색지대 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회색지대에서 분쟁 당사국 사이에 존재하는 이익(interest)과 역량(capability)의 비대칭성(asymmetry)이 발생한다. 이익의 비대칭성은 분쟁 당사국 간에는 어떤 목표에 대한 이익의 강도가 비대칭적이며 회색지대 전략을 추구하는 국가가 이익경쟁을 유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역량의 비대칭성이란 회색지대 전략을 추구하는 국가는 힘의 상대적 열세를 극복하면서 확전의 위험성을 피하고자 군사와 비군사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은 소규모의 비대칭 전술을 사용한다(이상현 2020, 98).

둘째, 전략적 점진주의(incrementalism)이다. 이러한 노력은 즉시 결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시도로 동시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되도록 조정된다. 일종의 살라미 전술, 침식의 전술과 같은 형태이다. 이러한 전술은 경쟁국으로부터 중요한 군사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의 목표를 향해 제한적이지만 꾸준한 행동을 한다(앤드류 에릭슨·라이언 마틴슨 2020, 20). 이러한 점진주의의 목적 중 일부는 억제력을 복잡하게 하고 억제력 위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회색지대 작전은 레드라인(red line)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응 방식을 선택하기 어렵게 한다. 즉, 회색지대 전략에는 전략목표가 숨겨져 있지만, 명백한 고의성이 있으며 한 번의 시도로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결정적 대응(decisive response)이나 서전 억제 조치의 시행을 어렵게 한다(김창곤 202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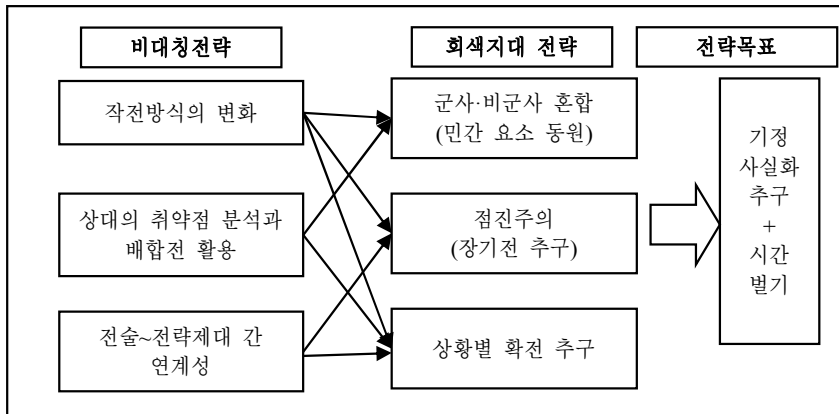
셋째, 회색지대 전략은 확전의 위험을 포함한다. 회색지대 전략은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군사적 대치를 추구하지 않지만, 확전과 위기를 고조시켜 명분을 축적하고, 추후 군사적 이점을 증대하려는 목적이 있다. 또한, 비군사적 수단을 병행하여 활용하여 직접적인 군사적 대치는 회피한다. 이를 이해 다양한 수단들이 조합되며, 정보작전과 역정보는 주요한 비군사적 수단으로 활용된다(김창곤 2020, 100).

이상의 특징으로 볼 때 회색지대 전략을 추구하는 세력(국가)은 현 질서나 규칙, 규범에 대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자 하며, 그 수단과 방법은 비군사적 수단, 때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을 사용하여 상대국이 마땅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강도는 상대방이 위협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회색지대 전략을 사용하는 세력(국가)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일정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며, 이를 군사적 수단이 뒷받침한다.

3. 분석의 틀

필자는 중국이 주변국과 해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우세에 있는 비군사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중국적으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중국은 해군력 현대화와 전력 증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을 비롯하여 미국의 지원을 받는 동맹국들에 비해 우세를 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 어선, 민병대, 이들을 지원하는 인민해방군 해군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상대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즉, 중국은 해양에서 비대칭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회색지대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 1] 비대칭 전략과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의 연계성



* 출처 : 저자 작성

[그림 1]은 비대칭 전략과 중국이 추구하는 회색지대 전략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은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전략과 해군력 증강을 위한 시간별기 전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이 최종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내 해상패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아직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비해 해군력이 열세하므로 비대칭 전략 수단으로써 비군사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음을 사례 분석을 통해 입증하고, 중국의 전략이 우리에게 미칠 위협과 군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Ⅲ.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 수단과 적용 사례 분석

1. 추진 배경

중국은 총 14개 국가와 22,800km에 달하는 육상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대륙 국가다(외교부 2020, 7). 그러나 중국의 경제력 성장으로 기존 대륙 국가로서 역량에 더해 해양 국가로서 능력을 지속 배양해 왔다. 중국이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해양전략을 발전시켜 왔다면 시진핑 지도부 등장 이후 안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중국의 주권과 국익을 보호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해군의 위상과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김한권 2017, 1).

2013년 3월 출범한 시진핑(Xi Jinping) 지도부는 해양 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013년 7월 거행된 제8차 중앙정치국 집체 학습에서 시진핑은 중국은 육상대국이자 또한 해양 대국이며, 광범위한 해양전략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며 해양 정책의 지속적인 강화의 의지를 보였다(김한권 2017, 9). 이러한 지도부의 의지를 반영하여 2015년 중국의 국방백서는 그동안 육군을 중시하고 해군을 경시하는 전통적인 사상은 반드시 타파해야 하며, 전략적으로 해양을 다스리고 ‘해권(海權)’ 보호를 매우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2017년 국방백서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침범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도발 행동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시진핑 주석 취임한 이후 중국은 본격적으로 해상 강국이 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해양전략 개념 정립과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

다. 중국이 해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동기는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 발전과 해외에서 중국의 이익 보호 그리고 시진핑 시대에 들어 ‘중국몽’의 추진 등이 복합되어 작용하고 있다(Tobin 2018, 16-48; Yoon 2015, 40-64).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도련선 전략을 인도양 쪽에서는 진주만 목걸이 전략을, 그리고 해양 영향력 확장을 위한 일대일로 전략 등을 통해 동아시아 해양에서 해권(海權)을 장악하기 위한 해양 팽창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충석 외 2020, 5). 그러나 아직 이 지역에서 미국의 해군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규 해군력에 추가하여 해양경찰과 해상민병대 세력을 활용하여 회색지대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2.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수단

1) 정규해군(PLAN :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PLAN)은 30만 명의 병력과 항공모함 3척을 포함한 535척 이상의 함정, 6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함대로 북해, 동해, 남해함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육전대(해병대) 수 개 여단을 보유하고 있다. 해군현대화 계획에 따라 핵잠수함, 항공모함, 강습상륙함(LHD), 선거형 상륙함(LPD), 구축함(055형, 052D형), 호위함(054A형, 056A) 등 신형함정을 지속 건조하여 원양 전력 투사 및 상륙전 등 종합 해양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함재 항공기(고정익, 회전익) 및 해상초계기 등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계속하여 작전 능력을 향상하고 있으며, 새로운 함정의 진수, 해군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현대화는 그동안 수상함대 증강과 기존 시설의 정비를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경쟁국인 대만, 일본, 베트남, 필리핀, 인도의 해군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세력 확장을 통해서 남중국해에서 세력을 투사할 수 있고,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해군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세력을 증대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마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남중국해에서 해양주권문제로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Cronin & Neuhard 2020, 14-28).

2) 중국 해경(CCG : China Coast Guard)

중국 해경(CCG)은 2013년 ‘오룡(五龍)’으로 불리는 다섯 개의 해양 집행기관 중 네 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발족하였다. 이들 기관은 해양국 소속 해감총대·농업부 소속 어정국·해관 소속 해양밀수단속대·공안부 변방국 소속 해경이다. 통합 이전 법 집행 및 해양주권 보호 업무는 이들 기관에서 분산되어 수행되었다. 중국해감은 배타적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불법 어업 단속과 해양주권 수호를 담당하였고, 영해 및 접속수역 내에서의 범죄단속과 수색구조는 변방국 소속 해경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가 해양 문제를 ‘핵심 이익’(core interest)의 하나로 규정하고 해양 굴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경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해경의 소속도 국무원 산하 국가해양국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무경(武警)으로 변경하였다(김석균 2018, 1).

2018년 6월에는 중국 해경은 해양 자원의 이용, 해양 환경보호, 해양 안전 보호 등 불법행위 대비, 평화와 질서 유지, 해상 보안 보호 등을 위해 민간 법 집행기관과 마찬가지로 해양권과 법집행권을 부여받았다. 2021년 2월부터 중국의 해안경비법은 해경 선박이 중국해역을 떠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는 외국 선박에 물리력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중국 해경은 평시에는 밀수 방지 작전을 포함한 해안 및 해양 수색과 구조 또는 순찰을 주로 수행하며, 전시에는 인민해방군 해군(PLAN) 통제하에 해상작전을 수행한다.

중국 해경의 임무는 중국의 해양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해양경찰로서 기능과 국방의 역할로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속이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무경으로 변경됨에 따라 준군사적인 것보다 군사적 성격이 더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분쟁 수역 및 지형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다. 다른 연안 국가의 어선 간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중국 어업 권리의 수호자로서 해경의 임무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양 분쟁 수역에서 마찰 발생 시 중국 해경의 대응은 더욱 거칠어지고 강압적인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석균 2018, 2).

근해 회색지대 해상작전의 핵심 구성요소인 중국 해경은 해군 전투원을 직접 활용하지 않고도 관할해역 내 해양 상황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켜줌으로써 사태 악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덕분에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PLAN)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공해상에서 다른 해군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국 인

민해방군 해군이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게 함으로써 서해, 동·남중국해에서 주변국과 충돌 발생 시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장비할 수 있다. 해경의 이러한 역할 수행으로 중국은 강력한 ‘제2의 해군’을 얻게 되었다(McDevitt 2016, 59-61).

중국은 세계 최대의 해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의 해경 세력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해양법 집행 선박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해경이 보유한 선박의 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일본 약 80척, 미국 약 50척, 한국 약 45척을 훨씬 능가하는 500톤 이상의 선박 225척을 보유하고 있다(앤드류 에릭슨·라이언 마틴슨 2020, 6). 1만 톤 이상의 적재량을 가진 두 척의 자오터우급(Zhautou-class) 초계함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안 경비함이다. 2020년까지 중국 해경은 해상(500톤 이상의 배)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260척의 배를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전력 증강을 추진하였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분쟁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최근 중국 해경의 선박들은 질적으로 크게 개선되었고 대부분의 해경 함정들은 30mm와 76mm 대포로 무장하고 있다(앤드류 에릭슨·라이언 마틴슨 2020, 6).

〈표 1〉 2005년~2020년 중국 해경의 전력 증강현황

등급(형식, 배수량)	2005 (척)	2010 (척)	2017 (척)	2020 (척)	증가 수(%) (2005~2020)
해양순찰선(2,500-10,000)	3	5	55	60	57
지역순찰선(1,000-2,499)	25	30	70	80	55
지역순찰선(500-999)	30	65	100	120	90
계: 연안에서 운영 중인 선박 수	58	100	225	260	202(350%)
해안순찰선(100-499)	350	400	450	450	100
근해순찰선 / 소형선박(<100)	500+	500+	600+	600+	100(약)
총합	900+	1,000+	1,275+	1,300+	400(약)

* 출처 : 앤드류 에릭슨·라이언 마틴슨 2020, 120.

2020년 현재, 중국 해경은 총 1,300척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해안 및 근해에서 순찰 임무를 수행하는 배수량 500톤 미만의 1,050척의 작은 함선과 500~1만 톤급의 연안에서 운영이 가능한 260척의 함선을 운용하고 있

다. 500톤 이상의 함선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운용이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된다.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규모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동안 총 400척이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연안에서 활동이 가능한 선박이 2005년에 비해 350%나 증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1>은 중국 해경의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전력 증강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해경을 신설하면서 해상 전력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중국은 확립된 영해와 EEZ의 안전 확보 임무에 계속 집중할 것이지만 중국 해경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지원하고 법 집행 및 감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1도련선 내의 수역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3) 중국 해상민병대(PAFMM : People's Armed Forces Maritime Militia)

중국 해상민병대(PAFMM)는 해양 산업 종사자를 중국 군대에 직접 통합한 것이다. 주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중국 해상민병대는 종종 중국해군에 의해 조직되고 훈련되며 필요에 따라 운용된다. 이들은 어선과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회색지대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는 선박을 갖추고 있다. 2015년 이래 중국은 전직 군인들에게 높은 봉급과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해상민병대를 전문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어업 책임이 없는 민병들은 경무기를 포함한 다양한 평시와 전시 상황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하고, 심지어 어업 유예 기간에도 분쟁에 휩싸인 남중국해의 지역에 정기적으로 배치된다(앤드류 에릭슨·라이언 마틴슨 2020, 6).

해상민병대는 중국의 정규군이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투부대로써, 광범위한 임무 수행과 더불어 고강도 전투 및 재래식 군사 충돌에서도 활용된다. 해상민병대는 다양한 전시 및 평시 임무를 수행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한 국방 동원체제(NDMS: National Defense Mobilization System)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앤드류 에릭슨·라이언 마틴슨 2020, 148). 평시에 인민해방군 지휘계통에 따라 중국 영해에서 외국 선박의 활동을 감시한다. 해상민병대는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수많은 보통 고기잡이 선단으로 상황 발생 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을 지원하는 어선들이다. 다른 하나는 전업 해상민병대로 더욱 전문화되어 있고 더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어 직접 정규군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은 해군 보조함대의 해상 선봉대로, 어업이 이들의 목표는 아니다.

해상민병대의 임무는 회색지대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것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나 해경과 비교하면 기술적으로 정교하지는 않으나, 승조원의 신분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해군과 해경에서 이들을 운용하면 생각보다 더 도발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정규군의 전력을 보강할 수 있다. 전시에 인민 해방군은 외국 해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일정 분야에서 해상민병대에게 의존할 수 있다. 고정 및 이동 부대를 가진 동원 민병대는 인민 해방군에게 다양한 형태의 정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교전 중에 적절한 훈련을 받고 장비를 갖춘 민병대는 인민해방군 해상 정보, 감시 및 정찰(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자산을 보완하여 기술적·전자적인 정찰, 관찰 및 전역 전투부대 명령에 대한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앤드류 에릭슨·라이언 마틴슨 2020, 167-172; Zhang & Bateman 2017, 288-314).

중국 정부가 해상민병대를 지시, 통제 및 지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로는 첫째, 중국 정부의 정치 및 군사 당국은 ‘군-민 이원구조’를 통해 해상민병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둘째, 중국 정부는 해상민병대 부대에 특정 작전을 수행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셋째, 정부(특히 인민해방군 해군 포함)는 활동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한다. 넷째, 정부는 할당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상민병대를 무장시키고 재보급한다. 다섯째, 정부(특히 인민해방군 해군을 포함)는 해상민병대의 인원을 훈련시키고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여섯째, 정부는 해상민병대의 개별 구성원에게 보상을 한다. 일곱째, 정부는 해상민병대 요원을 징계할 권한이 있다. 이 증거는 중국 정부가 다양한 수준에서 해상민병대에 대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입증한다(앤드류 에릭슨·라이언 마틴슨 2020, 62-63).

3.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적용 사례 분석

1) 센카쿠열도 실효 지배 무력화 시도 : 점진주의 + 배합전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무력화를 위해 중국은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무력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일본이 센카쿠열도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한 이후 중국외교부는 센카쿠열도에 대한 주권을 재천명하였고, 2013년 11월에는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선포하였다.

중국어선은 2016년 8월, 4일 동안 해상민병대가 편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300여 척이 센카쿠열도 해역에 출현하였다. 이때 28척의 중국 해경선들은

영해에 진입하였고, 52척의 해경선은 접속수역에 진입하였다(Morris et al. 2019, 94-96).

중국 해경은 센카쿠열도 근해에 진입하여 3-3-2패턴(한 달에 3번, 3척이 거의 2시간 동안 영해에서 활동)하다가 2016년 후반기부터는 3-4-2패턴(한 달에 3번, 4척이 거의 2시간 동안 영해에서 활동)을 보이고 있다(Morris et al. 2019, 8-12).

2020년 이후 중국 해경은 센카쿠열도 접속수역에서 장기간 활동과 영해 내에서의 장시간 체류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111일 동안 센카쿠열도 접속수역에서 활동을 지속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중국 해경은 영해에서 30시간 이상씩 체류하기도 하였으며, 영해에 진입한 일본 어선을 추격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Lin et al. 2022, 79-88).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2015년 센카쿠열도 근해에서 처음 접속수역을 향해하였고, 2016년 6월과 2018년 1월, 2022년도에서 중국 군함이 센카쿠열도 접속수역을 향해한 바 있다. 중국 공군기도 센카쿠열도 주변해역 상공 비행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중국 공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 긴급 출격을 2010년에는 96회 하였으나 2019년에는 675회 하였다. 중국은 일본에 비해 공군기가 센카쿠열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5분 이상 빠르기 때문에 일본의 전략적 약점을 활용하고 있다(국방대학교 2022, 25).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일본과의 센카쿠열도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민간 어선으로부터 해경, 해·공군이 포함된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의 대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강도와 횟수가 점차 늘어나고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센카쿠해역에서 점차 세력을 증가하여 일본이 보유한 대응 자산의 범위를 넘어서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아울러 비군사 세력과 군사적 수단을 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2) 남중국해의 중국 내해화 추구 : 점진주의를 통한 기정사실화 전략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에는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국이 개입하고 있다. 중국, 대만 그리고 베트남은 남사군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필리핀은 부분적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왕가가 2018, 51; Emmers 2010, 65-86).

중국은 남중국해에 9단선을 설정하여 이 지역의 수역을 내해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1974년 베트남이 실효지배 중인 파라셀군도, 1988년 스프래틀리군도 내 피어리크로스 암초, 1994년 필리핀이 실효지배 중인 미스치프 암초, 2012년 필리핀이 실효지배 중인 스카버러 암초를 강제 점령한 바 있다. 2021년 3월 스프래틀리군도 내 필리핀이 실효지배 중인 횡선 암초에 중국어선 220여 척이 정박하기도 하였다. 향후 중국은 스프래틀리군도 내 베트남과 필리핀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섬과 암초에 대해 강제 점령을 시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민귀식 2022, 1-18; Borton 2015, 35-46; Poling 2020, 1-9; Hayton 2014, 151-179; Kaplan 2014, 32-50).

중국은 9단선 내의 해양관할권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자원탐사활동을 강화하고 분쟁당사국의 자원탐사활동을 방해 및 억제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주요 암초에 인공섬 및 군사기지화를 통해 남중국해 해양통제권 장악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다(US DoD 2021, 104).

중국은 2017년과 2021년 통킹만 근해, 2019년과 2020년 파라셀군도 근해, 2022년 3월 통킹만 근해에서 군사훈련을 지속 실시해 오고 있다(국방대학교 2022, 34). 이 지역에서 중국이 해상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분쟁국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해군력이 우세해짐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군사력을 직접 사용하여 관련국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다수의 분쟁 상대국을 대상으로 지역 내 암초 등을 점령하고 군사기지를 설치함으로써 내해화하고 해양통제권을 장악하려는 전략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자신이 설정한 9단선 내에서 분쟁 당사국들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 및 비군사적 활동을 병행하여 활용함으로써 남중국해의 해양관할권이 자국에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다.

IV. 한중 간 갈등 요소와 우리 군의 대응 방안

1. 해상에서 한중 간 갈등 내재 요소

1)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미확정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1982년 채택되어 1994년 발표되었다. 이 해양법협약은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확정하였고,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관리, 천연자원(생물, 무생물)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인공섬 및 기타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관할권,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다만 다른 나라도 EEZ에서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전선, 관선 부설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해에서는 중국과, 동해와 남해에서는 일본과 EEZ가 중첩되며, 동중국해에서는 한·중·일 3국의 EEZ가 중첩되고 있다. 해양법협약에서는 EEZ가 중첩되는 경우 합의에 따라 공평한 해결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합의에 이르는 쉽지 않다. EEZ 경계획정이 어려운 것은 EEZ에 걸린 국익이 지대하고, 해양 경계선은 한번 확정되면 시한 없이 영구히 지속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외교통상부·해양수산부 1999).

서해와 동중국해 상에서 EEZ가 중첩되지만 한·중 양국은 각각 유엔해양법에 따라 각각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양측은 두 곳에서 EEZ 경계획정 및 교섭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잠정적인 성격의 한중어업협정을 1998년 11월 가조인(假調印)하였다. 이후 이 협정은 2000년 8월 정식 서명을 거쳐 2001년 6월 30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발효일로부터 4년이 지나간 2005년부터 어업협정에서 규정한 과도수역은 한국과 중국의 EEZ로 귀속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어선들은 한국의 EEZ에서 전통적인 조업 관행과 중국 연안의 어자원 고갈 및 다핵 욕구로 인해 불법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해경은 영해에서 불법조업 하는 중국어선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나 불법어로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해역은 한중어업협정으로 모든 중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수역임에도 증가세를 보인다. 이들은 남북한 간의 대치 상황을 교묘히 이용해서 한국의 어류 자원을 남획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어로 행위는 중국 연안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자원 고갈, 중국 내 어류 소비 증가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이기수·최진혁 2016, 172).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단속이 강화되면서 중국어선들은 단속에 맞서 쇠막대·도끼·삽 등 흉기를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한다. 우리 해경의 나포 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배에 쇠창살을 설치하거나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화하고 흉포해지고 있다(김석균 2016, 1).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2008년과 2012년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한국 해경이 사망한 사건, 2016년 중국어선의 폭력적인 저항으로 해양 경비안전부 본부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사고(제346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와 다수의 단속 인원이 부상하였다. 외신에서는 이 사건을 불법조업과 관련된 중국 해상민병대 활동의 전조(前兆)라고 진단하였다(이서항 2023, 4).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행태는 점차 지능화·홍포화, 조직화·집단화, 외교·안보 문제로의 비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이기수·최진혁 2016, 173-174). 아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2015년 이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꾸준히 우리의 EEZ와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

<표 2>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나포(척)	378	248	160	136	115	18	66	42	1,163
배타적경제수역	소계(척)	367	225	151	129	106	14	62	1,092
	무허가(척)	69	63	19	10	10	2	22	202
	제한조건 위반 등 (척)	298	162	132	119	96	12	40	890
영해 침범(척)	11	23	9	7	9	4	4	4	71

* 출처: e-나라지표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현황.” (2023/03/15 검색).

이와 같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어느 정도 중앙정부의 ‘관여 및 개입’하에 이뤄진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과 지휘를 통해 중국어선을 통제하고 있다. 어선에 포함된 해상 민병 활동에 대한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향후 한중 간 EEZ 획정 시 중국 측에 유리한 협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중국에 서해는 제1도련선 내에 있고, 수도 북경과 최대항구 상해 등 중국 제1, 2의 도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 핵심 해역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내해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중국은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서해에 맞닿아 있는 다롄(大連)항을 군사 기지화함으로써 유사시 서해상으로 해군력을 투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중국은 한국과 해상 경계선이 동경 124도 선에 해당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데 이 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서해 전체면적의 약 70%를 중국이 차지하고 나머지 약 30%만을 우리가 갖게 된다(이은수 2022, 1-4). 중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은 회색지대 전략의 일환인 ‘기정사실화’ 전략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이어도 해양 관할권

이어도(파랑초, 소코트라 암초)는 제주도 남서방 149km(80해리), 중국 서산다오(산도, Sheshandao)로부터 동쪽으로 155해리일(287km), 일본의 도리시마(鳥島, Torishima)로부터 서쪽으로 149해리(276km)의 거리에 위치하는 바닷속의 암초이다(송성대 2016, 114). 이어도가 위치한 해역은 1952년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을 선언한 평화선 선포 수역 내에 있어 우리나라의 해양 관할권에 속했다. 또 1970년에 제정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상의 해저 광구 중 제4광구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륙붕의 일부이기도 하다¹⁾. 이어도는 평상시에는 수심 4.6m 높으로 잠겨 있으나 파도가 심하게 치는 날이면 드러나 보인다. 이어도는 국제법상으로 섬이 아니며, 따라서 영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또는 대륙붕의 기점이 될 수 없다.

이어도 자체는 EEZ를 가질 수 없으나 제주도로부터 200해리 이내에 있어서 우리 EEZ의 권원 내에 있다. 한편 이어도는 중국으로부터도 200해리 이내에 있어 중국의 권원도 이어도 주변 해역까지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 주위에서는 한·중 간에 EEZ 경계획정이 되어야 하지만 이어도는 중국보다 우리나라 쪽에 더 가깝게 있으므로 경계획정 이전이라도 그 주변수역은 우리의 EEZ라 볼 수 있다. 이어도 해상은 공해가 아니므로 일본을 포함한 제3국 어선은 사전 허가 없이도 우리 수역에서 조업할 수 없다. 제주도 남부 동중국해 수역 전체는 앞으로 한·중 간 또는 한·중·일 간 EEZ 경계선이 그어져야 할 수역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어도는 우리 연안에 더 가까워서 그 주변수역은 궁극적으로 우리 EEZ로 확정될 것으로 본다(외교통상부·해양수산부 1999, 23-24).

이어도에는 1995년 기획을 시작하여 완공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어 있어서 해류·풍향·풍향과 수심·강우량·수질을 측정하는 44종 108개의 최첨단 관측장비와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이어도는 한반도에 오는 태풍의 40%가 지나치는 곳에 있어 2003년 완공 이후 기상예보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지는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게는 2,200톤, 높이 36.5m인 구조물로 1,600여 톤의 강철 기둥 위에 설치되어 있다(김지예 2012, 40-41).

중국은 이어도가 중국관할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1) https://www.khoa.go.kr/ors/station_intro1.do (2023/04/10 검색).

포함돼 있다고 본다. 중국은 2006년 후진타오 주석이 ‘해양 대국’을 선언한 이후부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쑤옌자오’라는 이어도의 중국명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이어도가 대륙의 지질학적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해저지형 상에 있으므로 대륙붕 자연 연장선의 원칙에 따라 자국 관할권에 속한다고 주장한다(김지예 2012, 41-42). 이러한 중국 측의 주장은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중간선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 우려되는 사항은 2019년 2월과 8월 사이에 서해와 이어도 근해 상에 부표를 8개 설치하였다. 부표 설치 목적은 명확하지 않으나 특정 위치를 표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군사 목적이 있을 수 있다(박창권 2019, 1).

중국이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한중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 그러나 동·남중국해에서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사용했던 회색지대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1차로 어선을 보내고, 이어서 수로측량선, 과학조사서 활동으로 우리의 대응을 고조시킨 뒤 무력 시위에 나서 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현재 이어도 해역은 한 중 간에 EEZ 경계획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첩된 EEZ에서 양국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제재할 수 없으므로 어장이 황폐해졌으며, 중국어선이 이어도 해역까지 나와 조업하고 있지만 우리의 어선들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어이도 해역에는 중국어선이 주로 활동하고 있다.

2. 우리 군의 대응 방안

1) 해양분쟁 대응 자산 통합 운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정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민·관·군·경·소방에 대한 역할과 임무를 구체화 하고, 관할 지역 내 지역(해역)군 및 경찰청장 주도의 지휘관계와 전력 등을 편 성하기 위해 상호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계센 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공유체계를 확대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및 통합방위작전 수행체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국방부 2023, 78). 또한, 해양수산부-국방부(합참)-국가정보원은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바다 내비게이 션(e-Nav)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양 안전·안보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안경계작전 간 선박(표적)의 추적 및 관리 여건이 개선되었 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상황에 대한 같은 인식을 공유 하면서 협조 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국방부 2023, 81).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서해와 이어도 해역에서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방위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현 통합방위법의 목적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령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상에서 발생하는 국지도발 상황을 상정하여 그에 따른 통합방위기구 운용, 경계 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국가 중요시설 및 취약지역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현 통합방위법은 지상 인근 혹은 지상, 내륙에 침투한 적(불순 세력, 주로 북한군)으로부터 아군의 병력, 시설, 장비, 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전력을 어떻게 운용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영해 혹은 EEZ 내에서 발생하는 적의 도발 행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방위 대책 관련 내용이 누락 되어 있다. 즉, 이어도와 서해상에서 중국 해상민병대에 의한 저강도 도발 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추가·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해상 회색지대 전략을 비대칭 전략으로 활용하여 상대국의 전통적인 대응 방안을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법령 정비를 통해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국립해양조사원 등을 통합 운용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2) 한·중 간 우발 충돌 방지 협력 채널 구축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우호협력관계’를 설정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왔다. 2008년에는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에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하였다. 2018년 12월 양국은 국방교류협력 정상화에 합의하고 2020년 이후 코로나 19 확산의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을 통해 소통 및 교류를 지속하면서 두 차례의 국방장관 유선회담을 가졌다. 2022년 6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의 참석을 계기로 양국은 국방부장관 회담을 통해 해·공군 직통전화를 추가로 정식 개통(총 6개 운용)하였다(국방부 2023, 175-176).

한·중 간에는 이외에도 외교부가 주관하는 한·중 해양협력대화, 국방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양국 국방부 및 해·공군 교류 활성화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상에서 우발적인 충돌에 대

응하기 위한 채널은 부족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중국 국방부와 직접적으로 중국과 해상에서 민간-민간, 민간-군, 군-군 간의 충돌 발생을 방지하고, 우발상황 발생 사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 채널을 추가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3) 서해상 해군 전진기지 건설

우리 군은 중국 해상민병대(PAFMM)를 단순한 어선 집단으로 인식하지 말고 잠재적인 국익 훼손 가능성이 있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준군사조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 해상민병대는 인민 해방군 해군(PLAN), 해경(CCG)과 함께 중국의 3대 해군 전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8년 중앙군사위원회 산하로 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해상민병대는 결국 중국 군부의 직접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준군사조직이다. 따라서 중국해군이 필요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세력으로 인식하고 대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 군의 유사시 대비계획은 대부분 북한의 도발 및 전면전 상황을 상정하여 수립되어 있는데 중국 해상민병대에 의한 해상 도발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계획이 요구된다. 현재는 해양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해군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불법조업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외교적 마찰 발생과 확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실행에 제한사항이 많다. 그러나 해군의 전진기지 개념으로 해상바지(Barge) 등의 이동식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4) 동맹국과 연합 대응 전략 모색

중국의 회색지대 작전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중국어선과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합하여 도발을 벌이는 경우이다. 물론 제1·제2연평해전, 대청해전을 통해 NLL을 침범할 시 어떠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켰기 때문에 북한 단독으로 도발 행위를 범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이 연합하여 불법조업, 해상사위 등의 계산되고 의도적인 행동을 할 경우 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제3국이 포함된 상황에서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군사적 측면 외에도 다각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NLL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은 서해를 내해화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가 악화하였을 때 2016년 9월 서해에서 3개 함대 모두를 동원한 대규모 실탄훈련을, 12월에는 항모 랴오닝함 항모전단이 실탄사격 훈련과 연습을 시행하였다. 2016년 이후 매년 서해 상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정례화하고 있는데, 동경 124도 선(박수찬 2022) 서쪽을 자신의 영유권으로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향후 한국과 서해 해상 경계선 획정에 대비한 ‘실효적 통제’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2월에는 중국해군 함정이 동경 124도 선을 넘어 백령도 전방 40km 해상까지 진출하기도 하였다(이철재·박용한 2023). 그러나 동경 124도 선은 명백히 공해 수역이고 만약 중국 측 주장을 수용하게 되면 서해의 70% 이상이 중국관할이 되고 만다. 아울러 중국관할이 되면 북한 간첩선의 우회 침투를 막기 위한 탐색 작전을 할 수 없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우리 군은 회색지대 전략의 일종인 중국해군의 살라미 전술과 기정사실화 전술을 경계해야 하며, 특히 중국과 북한 해군이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동·서해상에서 우리의 영해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서해에서 우리가 동경 124도 선에 대해 침묵한다면 중국해군의 작전구역을 인정하는 것이고 결국 서해를 중국에 내주는 것이므로 해군 2함대와 중국 북해함대 간 계속 대화하고, 때로는 해군 전투함을 동경 123도 선까지 파견해 우리 군의 의지와 능력을 현시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해군이 NLL 작전에 발이 묶이지 않도록 북한 해군과 불법조업 어선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서해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사용하게 됨으로써(신경진 2023) 앞으로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에서도 중국의 해군함정 출현을 경계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동·서해상에서 중국과 북한 간의 연합전선 구축, 중국의 서해·동해상에서 세력 확장은 우리나라 단독으로 대처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단독으로 대응이 가능한 분야와 한·일, 한·미, 한·미·일 간 연합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대응할 분야를 설정하여 동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5) 회색지대 전략 대응 교리 및 전술 개발

교리는 군부대나 그 구성원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적용해야 할 공식적으로

승인된 군사행동의 기본 원리·원칙과 기술, 전기, 절차, 용어 및 부호를 말한다. 교리는 전쟁과 전쟁방식에 대한 논리적 관점을 제공하고, 작전 수행에 공통으로 필요한 군사 용어 및 부호와 참조 틀을 제공하며, 작전과 교육훈련을 인도하는 원리와 지침을 제공해 효율성을 증진한다(육군본부 2021, 1-2).

이러한 교리는 군사사상과 이론, 적 위협과 안보 환경 변화, 각종 전쟁과 전투, 작전과 훈련의 직간접적 경험과 전훈·교훈 분석 결과 등을 분석하며, 강대국의 발전된 교리를 모방하거나 교리혁신을 통해 변화·발전한다. 때로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무기체계의 발전, 급격한 부대의 증·창설 등이 교리를 선도하기도 하고, 반대로 교리가 무기체계의 발전을 촉진하면서 상호 연계하면서 발전한다(육군본부 2021, 27).

그동안 우리 군의 교리 발전은 위에서 언급했던 요소들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전해 왔다. 우리 군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경험, 미군의 교리를 수용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부합되게 교리를 발전시켜 왔으며, 2000년대 이후 다양해진 전쟁의 양상과 스펙트럼을 반영하여 관련 교리를 정립하고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군의 교리는 휴전선(DMZ)을 맞대고 있는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북한이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관련 교리 개발도 이에 맞추어져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교리 발전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해양에서 위협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 따라 우리의 해양주권 수호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전략 변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우리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교리로 발전시켜야 한다. 주변국이 기존의 프레임과는 전혀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여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하여 유사시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V. 결 론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및 국방 예산을 바탕으로 압도적 규모와 고도의 기술을 집약하여 해상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 안보 환경은 다른 어느 때보다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중 간 국교 정상화 이후 3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나 여전히 양국 간에

는 해양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중국의 해양 굴기로 해상세력이 점차 증대함에 따라 중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향후 양국의 해양 경계선 획정, 대륙붕 개발, 해양과학조사 활동, 해양환경 보전 문제 등을 협의할 때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에는 동·남중국해 지역에서 해양 관할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통적인 전략과 전술에서 벗어난 ‘회색지대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해상민병대(PAFMM), 해경(CCG)과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PLAN)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련 당사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회색지대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준군사조직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증강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이들을 직접 지휘통제 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문제, 이어도 해양 관할권 문제 등으로 향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중국은 우리 해상에서 불법조업 등을 통해 이미 회색지대 전략을 시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 중국의 해양 굴기 정책이 지속되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게 되면 한·중 간에 해양 갈등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중국은 서해상에서 함대 기동훈련과 실탄사격 훈련을 빈번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서해 내해화를 위한 포석으로 동경 124도 선을 넘어 우리 영해 인근까지 군함을 기동하는 등 회색지대 전략의 하나인 살라미 전술과 기정사실화 전술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용자산을 통합 운용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해상에서 중국이 회색지대 전략을 통해 우리의 해상주권과 국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 시 어떻게 국가의 제반 요소를 통합하여 대응할 것인가를 반영한 법안 개정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기관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해상에서 한·중 간 우발 충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민간-민간, 민간-군, 군-군 간의 출동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 채널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서해상에 해군 전진기지 건설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이 추구하는 회색지대 전략은 확전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해군의 즉각적인 지원 태세 수립이 필요하다. 즉, 해경의 능력이 제한됨을 고려하여 해군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상 바지(Barge) 등의 이동식 해군 전진기지 건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동맹국과 연합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동·서해상에서 중국의 증강된 해군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대응능력과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한·미, 한·일, 한·미·일 간 연합세력을 구축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응할 교리 및 전술을 개발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작전환경은 전통적인 작전 수행 방식과 형태와는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회색지대 전략의 경우 군 단독으로 대응하던 전통적인 방식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제 작전 요소를 통합하여 대응하기 위한 교리와 전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추구는 우리 군에게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회색지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조(structure)와 방식(contents)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회색지대 전략은 주변국들에 의해 학습되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우리 군은 주도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고충석, 이서향, 이지용, 주민욱, 정대진, 김진호, 이상현, 이정우, 고경민. 2020.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서울: 인간사랑.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합방위법.” <https://www.law.go.kr/법령/통합방위법> (2023/04/11 검색).
- 국립해양조사원. “이어도해양과학기지.” https://www.khoa.go.kr/ors/station_intro1.do (2023/04/10 검색).
- 국방대학교. 2022. 『회색지대 전략에 대비한 대응방안 연구』. 논산: 국방대학교.
- 국방부. 2023. 『202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 김석균. 2016. “NLL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넘어 근본 대응책이 필요하다.” KIMS Periscope 45, 1-2.
- _____. 2018. “중국 해경, 군사조직으로 변신하는가?” KIMS Periscope 131, 1-3.
- 김예슬. 2020. “남중국해 해양분쟁과 회색지대전략(Gray Zone Strategy): 중국 해상민병대(Maritime Militia)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지예. 2012. “이어도: 중국의 다중잣대전략과 힘의 외교.” 『군사세계』 4월호, 40-42.
- 김진호. 2020. “중국 해양 회색지대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동북아논총』 25(2), 81-100.
- 김창곤. 2020. “한반도 주변의 회색지대(the Gray Zone) 위협과 대응방향.” 『군사연구』 149, 91-130.
- 김한권. 2017. “중국의 해양전략 I: 해양전략의 제도적 변화과정.”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IFANS 2017-21.
- 노병천. 1999. 『도해손자병법』. 서울: 연경문화사.
- 노 훈. 2013. “북한 비대칭 전략과 우리의 대응개념.” 『국방정책연구』 29(4), 86-87.
- 대한민국 국회. 2016.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10월 14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 민귀식. 2022. “남중국해에서 미·중 회색지대전략 경쟁.” *한중 Zine INChinaBrief* Vol. 406, 1-18.
- 반길주. 2020. “동북아 국가의 한국에 대한 회색지대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군사』 7, 35-69.
- 박수찬. 2022. “중 서해 124도에 멋대로 경계선... 올 100여 차례 군사훈련, 영해화 노력.” 『조선일보』 (8월 17일).
- 박창권. 2019. “중국의 서해 및 KADIZ 내 군사활동 증가가 주는 시사점.” *KIMS Periscope* 146, 1-3.
- 송성대. 2015. “한중 간 이어도 해역 경계획정의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한 리뷰.” 『이어도 연구』 6, 113-147.
- 신경진. 2023. “중국,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권 165년 만에 되찾았다.” 『중앙일보』 (5월 16일).
- 안덕신, 길병욱. “북한 대비칭전력 구축 결정요인 연구.” 『한국군사학논집』 76(1), 249-277.
- 양육. 2020. “회색지대 분쟁 전략: 회색지대 분쟁의 개념과 군사적 함의.” 『전략연구』 82, 249-280.
- 앤드류 에릭슨·라이언 마틴슨 저, 곽대훈 역. 2020. 『중국의 해양 그레이존 작전』. 서울: 박영사.
- 왕가가. 2018. “중국과 동남아시아간 남사군도 해양영토분쟁 소고.” 『국제해양법연구』 2(2), 51-89.
- 외교부. 2020. 『2020 중국 개황』. 서울: 외교부.
-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1999. 「한중어업 협정 해설」 (6월).
- 육군본부. 2021. 『육군 교리 발전사』. 계룡: 육군본부.
- 이기수, 최진혁. 2016.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64, 91-122.
- 이상현. 2020. “중국의 해양회색지대전략에 대한 일본의 대응: 법적 기반 정비와 해상안보·보안체제강화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52, 91-122.
- 이서향. 2023. “다시 떠오르는 중국의 ‘세계적’ 불법조업 문제.” *KIMS Periscope* 305, 1-6.
- 이은수. 2022.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KIMS Periscope* 278, 1-4.
- 이철재, 박용한. 2021. “40km 앞까지 왔다, 中 군함 대놓고 서해 위협.”

『중앙일보』 (1월 27일).

황진환. 2002. “북한의 대남 대비대칭전 수해 가능성에 관한 소고.” 『육사논문집』 58(1), 275-299.

e-나라지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22 (2023/03/15 검색).

영문 자료

Borton, James. 2015. *The South China Sea: Challenges and Promises*. Bloomington: Xlibris.

Cronin, M. Patrick & Ryan Neuhard. 2020. “China’s Political Warfare in the South China Sea.” <https://www.jstor.com/stable/resrep20439.5> (accessed 23 March 2023).

Emmers, Ralf. 2010. *Geopolitics and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New York: Routledge.

Goldenberg, Ilan, Nicholas Heras, Kaleigh Thomas & Jennie Matuschak. 2020. “Countering Iran in the Gray Zone; What the United States Should Learn from Israel’s Operations in Syria.” <https://www.cnas.org/publications/reports/countering-iran-gray-zone> (accessed 3 March 2023).

Hayton, Bill. 2014. *The South China Sea: The Struggle for Power in A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Kaplan, Robert D. 2014. *Asia’s Cauldro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nd of a Stable Pacific*. New York: Random House Trade Paperbacks.

Lin, Bonny, Cristina L. Garafola, Bruce McClintok, Jonah Blank, Jeffrey W. Hornung, Karen Schwindt, Jennifer D.P. Moroney, Paul Orner, Dennis Borrman, Sarah W. Denton & Jason Chambers. 2022. *Competition in the Gray Zone: Countering China’s Coercion Against U.S. Allies and Partners in the Indo-Pacific*.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McDevitt, Michael. 2016. “Becoming a Great “Maritime Power”: A Chinese Dream.” <https://www.cna.org/archive/CNA-Files/pdf/irm->

2016-u-013646.pdf (accessed 3 March 2023).

- Morris, Lyle J., Michael J. Mazarr, Jeffrey W. Hornung, Stephanie Pezard, Anika Binnendijk & Marta Kepe. 2019. *Gaining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ray Zone: Response Operation for Coercive Aggression Below the Threshold of Major War*.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 Poling, Gregory B. 2020. "China's Maritime Ambitions." <https://www.jstor.org/stable/resrep37624> (accessed 3 March 2023).
- Tobin, Liza. 2018. "Underway: Beijing's Strategy to Build China into a Maritime Great Power." *Naval War College Review* 71(2), 16-48.
- US DoD. 2021.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 Washington D.C.: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https://www.can.org/archive/CNA_Files/pdf/irm-2016-u-013646.pdf (accessed 15 March 2023).
- Yoon, Sukjoon. 2015. "Implications of Xi Jinping's "True Maritime Power": Its Context, Significance, and Impact on the Region." *Naval War College Review* 68(3), 40-63.
- Zhang, Hongzhou & Sam Bateman. 2017. "Fishing Militia, the Securitization of Fishery and the South China Sea Dispute."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9(2), 288-314.

Abstract

What Should Korean Military Do to Respond to China's Gray Zone Strategy? : Focusing on Response to Asymmetric Approach at Sea

Jung Joon Choi ■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In this article, I discuss China's Gray Zone strategy, which involves increasing their naval power and using asymmetric tactics to become a rising maritime power. After examining this strategy, I then discuss the sources of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s well as our military's response plan. The article also mentions that although South Korea and Chin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there are still many unresolved issues between two countries. Especially, issues such as the demarcation of the western sea border,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ivities, and marin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re still unresolved. Meanwhile, China is increasing its naval power and pursuing a Gray Zone strategy at sea using its Coast Guard(CCG) and Maritime Militia(PAFMM). Gray zone refers to the ambiguous middle ground between war and peace, and it refers to an indeterminate intermediate zone that does not belong to a specific area. China is pursuing a strategy that undermines the existing order by using gray zone operations in the maritime gray zones of countries with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and un-demarcated maritime boundaries in the East China Sea and South China Sea. By using non-military means, China is pursuing a "fait accompli" strategy through numerical superiority, gradualism, and repetitive activities while preventing the situation from escalating into armed conflict. China uses its Coast Guard and Maritime Militia as the main means of its gray zone strategy, which are essentially China's

second naval force and perform various missions on behalf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In Korea, there are many factors that cause conflicts with China in the ocean, such as the undefined Exclusive Economic Zone (EEZ) boundary and illegal fishing by Chinese vessels. China pursues a gray zone strategy to gain an advantageous position in future negotiations with Korea. Therefore, the Korean military must establish the following measures to protect its maritime interests. The response strategy below is based on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gray zone strategy, which is part of China's asymmetric strategy. First, in the event of a maritime dispute with China,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to integrate and operate available assets. Second, a cooperativ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prevent accident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China. Third, a naval forward base in the West Sea should be built to curb China's eastward movement. Fourth, strategies should be sought to respond in conjunction with allies. Fifth, the military's countermeasures and tactics for responding to the gray zone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Key Words: Asymmetric warfare, Gray Zone, the People's Liberation Army, the Maritime Militia, Fait Accompli Strategy.

